

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광주·전남 속도 내나

대전·충남 내년 지선서 통합 단체장 선출 지원 밝혀
광역연합 출범 단계 광주·전남, 행정통합여론 '솔솔'
정준호,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단일화 특별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준비 중인 광주·전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단일화 선출 여론도 나오면서 행정통합이 선거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지역정기예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체단체의 새로운 정장을 뽐낼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그동안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한 지원도 없다’던 정부의 기조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등 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대전·충남은 필두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전남지역도 행정통합만 결정한다면, 속도가 붙을 가능성 이 크다.

광주·전남에서는 기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연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자치단체인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특별광역연합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전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변경 규약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의회도 이를 반영해 지난 19일 최종 규약을 확정했다.

확정된 규약에는 특별광역연합 사무 개시일을 당초 ‘2026년 1월 1일’에서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안부 승인과 고시,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 연합 의회 구성, 연합 조

례·규칙 제정, 사무공간 마련 등 출범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약에는 6개월 이내로 명시했지만, 실무 준비와 출범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도의회에서 규약안이 최종 처리됨에 따라 시와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승인 및 고시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달 내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광역연합은 내년 2월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연합은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역 상생 발전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역연합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시민들의 인식과 수용 수준, 정책에 대한 기대 및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71.7%가 찬성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달 10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와 경제난 극복 해법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카드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전남지역 통합 단체장 선출도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단체장은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 조안을 완성했다”며 “광주와 전남의 광역단체장을 단일화하는 완전한 행정통합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특별강연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민석 총리 “AI·우주·에너지 중심지는 전남”

전남서 K-국정설명회…국립의대·RE100 국가산단 당위성 강조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이 제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민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농수산업 중심지 전남의 위상 강화를 위한 농협·수협 본사 이전 건의에 대해 김총리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흐름 속에서

설명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이뤄낸 국

민주권 K-민주주의 △외교 기초 △투명

한 경제 질서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

K-문화국가가 실현 등 향후 국정 운영의 큰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국무총리가 직접 전

남을 찾아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과

소통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남

도 정책 발전 차원에서 공감의 뜻을 나타

냈다. 전남도는 이번 국정설명회를 계기

로 AI·우주·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과 지역 현안을 보다 촘촘히 연

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K-국정설명회’는 김 총리가 직접 국

제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지

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을 연결하는 방식

으로 이뤄졌다.

김 총리는 강연에서 “‘약무호남시무국’

가’라는 말이 상징하듯 전남은 그 자체로

국가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AI, 우주, 에

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키워갈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밭전이 더딘 곳

일수록 국가 정책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작

동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전남의 새

로운 성장 경로를 열 준비가 돼 있다”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설립을 비롯한 전남 핵심 현안

이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이뤄낸 국

민주권 K-민주주의 △외교 기초 △투명

한 경제 질서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

K-문화국가가 실현 등 향후 국정 운영의 큰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국무총리가 직접 전

남을 찾아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과

소통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남

도 정책 발전 차원에서 공감의 뜻을 나타

냈다. 전남도는 이번 국정설명회를 계기

로 AI·우주·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과 지역 현안을 보다 촘촘히 연

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50조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 선정

AI컴퓨팅 센터·전남 해상풍력 등 7곳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1차 투자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 풍력 △K

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

△엔비디아 육성 △울산 전고체 배터리

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

펀드는 AI·반도체·비이오·로봇 등 첨

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

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전체 자금

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

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건설ティング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